

내년부터 위기청소년 전담공무원 배치

여가부, 지자체와 함께 위기청소년 지원

내년부터 위기청소년을 전담해서 관리·지원할 공무원들이 배치될 전망이다. 청소년인구 5만 이상인 시·군·구 등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들을 발굴·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이란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기관, 서비스, 정보 등을 총괄·관리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추진체계다.

그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대부분 민간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7개소)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학교·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가 어려웠고, 지속적인 관리·지원체계가 없어 위기청소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여가부는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관리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2019년 5월17일)한 바 있으며, 청소년안전망팀 설치에 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앞으로 설치될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은 사각지대 없이 고위기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경찰·법원 등과 정보를 연계하고, 지원서비스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경찰·아동복지기관 등과의 서비스 연계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위기종결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살·비행 등 고위기청소년은 지자체가 직접 사례관리를 총괄한다.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은 전국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청소년인구 5만 이상인 시·군·구 등에 전담공무원 배치를 유도해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여가부는 2020년부터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우수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9개 지자체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안전망팀의 본격적인 설치·운영에 앞서 올해 하반기

에는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 노원구, 경기 수원시, 수원 사하구, 광주 광산구, 전북 부안군 등 5개 지자체에서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광주시민사회 '조국 사태' 첫 시국성명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첫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예습계, 종교계, 교육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모임'은 26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국성명은 광주시민사회단체 대표 3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시민 780명이 서명했다.

각계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

사·기소권 독점 폐지 등 검찰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언론과 재벌, 교육개혁을 통한 사회대개혁도 주문했다.

이들은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방화책 마련 등 언론개혁을 추진해 극우언론이 부패기득권의 옹호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청년의 꿈을 앗아버린 불평등과 양극화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벌개혁, 교육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을 강력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망공·고구마 수확 집중한 어린이들 26일 전북 원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전시 포장에서 어린이들이 망공, 고구마 수확 체험을 하고 있다.

지난해 자살기도 출동건수 하루 평균 29회...매년 증가

최근 5년간 구조출동건수 4만7천건 달해

지난해 자살기도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하루 평균 29차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의 자살추정 구조출동건수는 총 4만735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출동건수는 1만 5696건으로 전년(1만1931건) 대비 31% 증가하는 등 매년 출동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29.3회꼴이다.

최근 5년 간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4년 5071건에서 2015년(6139건), 2016년(8468건), 지난해 1만 5695건 등 계속해 자살출동 횟수가 늘어났다.

최근 5년간 경기(1만1547건) 지역의 출동이 가장 많았고 서울(1만 1107건), 부산(3310건), 경남(2822건), 전북(2295건), 전남(1997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 유형별로는 약물·음독이 전체의 26.3%(1만850건), 추락·투신이 14.9%(6158건), 목매(7.9%, 3265건), 자해(7.9%, 3265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

한 '2018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670명으로 전년 대비 9.7%(1207명)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

표준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를 집계한 연령표준화자살률에서 26.6명으로 한국은 OECD 36개 회원국 중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했다.

김영호 의원은 "최근 국내 자살기도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소방관의 자살신고 구조출동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자살기도 출동 관련 소방청 예산과 인력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슈 판결

고물가격 흥정 농장주 살해해

저수지 유기 40대 '징역 35년'

광주고법 항소 기각... '죄질 극히 나빠'

고물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다 50대 농장주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26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1시 쯤 곡성에 있는 한 폐교에서 B씨(59)를 살해하고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날 오전 11시 쯤 B씨의 농장에서 고물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듣고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찌르면서 통장 비밀번호

를 알아내 12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통장에서 돈을 추가로 빼려고 했지만 지급정지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곡성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6시 가 족과 통화한 이후 연락이 끊겼고 B씨의 가족은 다음날 오전 8시40분 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살펴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더욱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1200만원의 예금을 인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 이후에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번갈아가면서 이용하거나 범행에 사용한 물건들을 소각하기도 했고, 제3자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이를 이용하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며 "A씨는 공기총을 이용해 세차레 강도행각을 벌였다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기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지,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은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성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